

산 자 부 , 중 소 기 업 M & A 촉 진 대 형 화 유 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유도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중소기업의 대형화 등을 통한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인수에만 국한돼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를 정상기업 및 유망기업 인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로 개편, 연장해 CRC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표준화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이며 대·중소기업 협력을 CSR 표준화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대·중소기업 협력촉진사업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산 자 부 , 바 이 오 산 업 발 전 위 한 ' 3·12프 로젝트 ' 제 시

산업자원부는 7월 8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바이오 벤처기업인과 바이오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바이오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3·12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 세계시장 점유율 7위, 일류상품 20개,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R&D, 인프라,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3대 정책목표, 12개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3대 정책목표는 첨단 바이오기술 상품화를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 지역혁신과 세계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인프라 구축, 바이오산업의 기업경영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화 기술 발전 로드맵 작성 ▲산업화 중심의 바이오 R&D 투자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융합신기술 발굴 ▲바이오 중심의 R&D 바이오스타 개발 추진 등 12개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이희범 장관은 "바이오산업을 정보기술(IT) 이후의 국민경제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도 바이오산업 3·12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통 부 , 대 · 중 소 기 업 간 상 생 , IT산 업 전 분 야 로 확 대

앞으로 통신장비 업체들의 애로인 최저가 낙찰제나 다단계식의 납품구조, 어음결제방식 등의 제도가 중소·벤처기업에 유리하게 조정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7월 5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와 장비를 납품하는 IT중소, 벤처기업에서 시작된 대·중소 벤처기업 간 상생적 협력 모델을 소프트웨어 및 IT제조업체 등 IT산업 내 모든 분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와 장비를 납품하는 IT중소, 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정통부의 상생협력은 그동안 통신서비스업의 성숙으로 통신사업자의 투자규모가 줄고, 납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하는 구매, 납품 과정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4. 21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과 확대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날 정통부는 SW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SW 제값받기운동을 전개해 SW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 추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 구성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주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IT부품, 소재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IT제조 대기업과 부품기업 간 상생 협력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기청, 하반기 1500억 원 중소기업·벤처 창업자금 증액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벤처 창업 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은 당초 3조 5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7월 중순부터 정책 자금 지원 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탈락 이후에도 재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등 경영·기술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자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11일부터는 정책자금 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원 프로세스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 금융권의 신용보증체제 개편에 따른 부분 보증비율 축소와 관련, 추가담보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협 중앙회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 벤처캐피탈에 BI센터 위탁

8월부터 벤처캐피탈이 BI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신기술 창업 촉진과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BI센터 벤처캐피탈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7월 말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신기술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창업투자회사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기존 다산벤처가 운영하던 '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시범 BI로 선정해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위탁 운영을 통해 창업보육과 투자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인큐베이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업 선별 능력이 가장 뛰어난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직접 보육을 통해 안정적인 성공 투자 기회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BI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투자 유치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기청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뜻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 벤처캐피탈 신청 업체 가운데 ▲위탁 사업 계획의 적절성 ▲경영진 추진 의지 ▲자체 대응투자 및 재무 안정성 ▲보육시스템 실현 가능성 등 4개 항목(100점 만점)을 평가해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보, 벤처기업 향후 3년간 10조 보증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앞으로 3년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에 따라 올해 2조 8000억원, 내년 3조 5000억원, 2007년 4조원 규모로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분참여에 의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해 용자보증 위주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기 하고, 현재 3700개 수준의 정보제공·공시협약 대상 벤처기업을 8000여 개로 확대해 지분분산이 양호하고 기술력·신용도가 우수한 벤처기업은 대표자 인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보증 공급기로 한 총 11조원 가운데 60% 이상인 6조 8000억원을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보는 지난 2001년 대규모 벤처지원에 따른 기금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한계기업이나 거액·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고, 오는 7~8월 본부조직 축소와 실적이 낮은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벤처 투자 본격화 된 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벤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창투사들의 투자여력에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창투업계와 벤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창투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집행되는 기관투자자의 벤처조합 출자규모가 총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1차적으로 6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출자해 만

든 한국IT펀드(KIF)도 올해 총 94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중기청의 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비중이 30~50%로 레버리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소 1200억원 이상 자금 조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 개 기관의 벤처조합만으로도 올해 투자될 수 있는 벤처자금 규모는 최소 42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크게 늘어난 벤처자금만큼이나 창투업계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6개사 위탁운용 공모에 28개사가 몰린 것을 비롯, KIF 위탁운용 공모에도 6개사 선정에 45개사가 응모했다. 자금을 대는 기관투자자들의 벤처투자 마인드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벤처투자에 나섰던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까지 연속 투자했었으나 지난해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올해에는 투자규모를 1500억원으로 보다 크게 늘렸다.

벤처기업 방송광고 요금 70% 할인 연장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김근)가 2006년 6월 말까지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벤처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는 광고요금의 7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8년 7월부터 시행해 왔다. 이 제도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벤처기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돕자는 취지로 시행했다.

참여업체는 라디오, TV등 매체별로 합쳐 약 589개사. 집행한 금액은 정상가 기준으로 582억원에 달하며, 70% 할인된 실제 집행액은 175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광고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408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한 셈이다.

대덕 R&D 특구 1950만 평으로 확대

대덕연구개발(R&D)특구의 범위가 최초 계획보다 약 700만평이 늘어난 1950만평 규모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연구소 기업 창업에 발목을 잡는 출자비율은 50%에서 20%로 대폭 낮아지고 녹지구역 건축규제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월 6일 과학기술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특구의 지리적 범위는 대덕연구단지 일대 840만평, 국방과학연구원 일대 150만평, 대덕테크노밸리 129만평, 북부 그린벨트 지역 669만평, 대덕테크노밸리~대덕연구단지 경계지 67만평, 3·4산업단지 95만평 등 총 1950만평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북부 그린벨트 지역의 면적이 충남 경계지까지 당초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일대의 경우 수남동 및 외삼동은 포함시키되 그외 지역들은 배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연구기관 출자비율은 대전시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50%에서 20%로 완화하고 특구 내 녹지구역의 건축규제 또한 주민들의 반발력을 감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통과가 유력할 전망이다.

이사장 선임 오리무중, 특구 號 표류

대덕R&D특구지원본부 이사장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면 결말이 나올 것이라던 계획을 번복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새로운 기관을 맡게 될 이사장이니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특구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연구개발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한 만큼 강력한 리더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특구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본부는 특구의 관리 및 종합지원을 맡게 될 기관으로 이번 공모는 어떤 사람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특구의 성공여부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

에 결과에 대해 더욱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7월 28일 본격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특구의 핵심주체인 지원본부는 아직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구법이 발효되기 전에 꾸려야 할 대략적인 조직이나 인력구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특구 출범 이후 새로운 조직과 통합하든 외곽조직으로 독립하든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와 대전 제3·4산업단지 관리공단 등은 특구지원본부 구성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4산업단지 관리공단의 한 직원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업체지원사업 등 몇몇 사업은 착수 시기가 계획수립에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빨리 지원본부가 구성돼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5 KOWVA 이 랜 서 세 미 나 개 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는 7월 14일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e-Lancer로 활동 중인 여성, 직장 여성, 주부, 소기업 창업희망자 및 e-Lancer에 관심 있는 여성이 참가한 가운데 '2005 KOWVA 이랜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출발! 이랜서로 자기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여성컨설팅 대표인 노주선 박사가 이랜서 자기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각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와의 교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랜서는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중소기업청의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KOWVA이랜서 양성사이트(www.elancer.or.kr)'를 통해 교육 및 프로젝트 중개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다.

VD Scrap

기 고
 오학근
 벤처기업진흥사업지원장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만으로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인재가 자라야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벤처 '희망 만들기'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만으로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인재가 자라야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 2005년 7월 1일
 머니투데이 6면
 최근 벤처기업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 스스로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공모델을 통해 우리사회의 '희망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회 오행근 부회장의 기고문

벤처창업 등 3조1000억 추가 지원
 당·정, 하반기 투자 활성화에 정책 최우선 두기로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2005년 하반기 투자활성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3조1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0% 증가하는 규모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2005년 7월 5일 전자신문 2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약에서 2005년 하반기 경제운용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공기업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 중소벤처 창업지원 규모 확대 및 IT응용기술 개발 등의 사업에 3조 1000억원 투입하기로 했음을 보도한 기사